

중대재해처벌법

중소자영업을 위한 대응 가이드

I

법령

국민 안전 교육 진흥 기본법 「법률 제16878호」 (약칭 : 안전교육법)

제 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해 관리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약칭 : 재난안전법)

제34조 6 '다중이용 시설 등'에 따라 위기사항 매뉴얼 작성과 안전교육 및 위기 상황 대피훈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자영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 본 교육은 소상공 및 자영업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대기업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소상공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법의 개요, 적용 범위, 그리고 대비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입니다.

2. 제정 배경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 그리고 그에 대한 미비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정되었습니다.

- 반복되는 대형 재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가슴기 살균제 사건, 서문시장 화재 등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경영책임자 책임 불충분
- “사고 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

3. 적용 범위

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었고, 특히 5인 이상~50인 미만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2) 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다수 시민 피해 발생

3) 적용 대상

원칙: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다만, 5인 이하도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민·형사 책임 불가피

그렇다면 소상공인은 해당될까요?

소상공인 경우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처벌규정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최대 50억 원 벌금
- 핵심: “예방조치를 다했는가?”

5. 법의 핵심 의무사항

-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3)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 4)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 5) 재해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보고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Ⅱ. 중소기업

업종별 주요 리스크

1. 업종별 주요 리스크

업종	주요 리스크	대표 예방조치
음식점·카페	▪ 가스 폭발 ▪ 화재 ▪ 식중독	✓가스·전기 점검, ✓냉장고 온도 기록, ✓소화기 관리
전통시장·의류상가	▪ 전기화재 ▪ 비상구 차단	✓전기배선 교체, ✓통로 확보, ✓합동 대피훈련
학원·PC방	▪ 미끄럼 ▪ 화재 ▪ 감염병	✓환기시설 점검, ✓대피훈련, ✓위생관리
병원·요양시설	▪ 감염병 ▪ 대피 곤란	✓감염관리 지침, ✓환자 대피계획 수립
소규모 제조업	▪ 기계 협착 ▪ 분진	✓보호구 지급, ✓기계 안전장치 점검
유흥업소·노래방	▪ 화재 ▪ 음주 사고	✓소방시설 정상 작동, ✓비상구 확보, ✓CCTV 운영
미용실·마사지샵	▪ 전기 ▪ 화학약품 ▪ 위생	✓전기 점검, ✓환기시설 가동, ✓위생 소독

2.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사전 준비

현장의 작업 공정별 분류

각 공정에 포함된 위험요소 목록화

② 위험성 평가

위험성 = 발생 가능성 × 중대성

위험도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 지정

③ 개선 대책 수립

고위험 작업에 대한 제거/대체/통제 방안 마련

보호구 지급, 작업절차서 작성, 교육 시행

④ 이행 및 모니터링

개선조치 실행 후, 정기적 점검 및 재평가

직원 교육 및 훈련 병행

3. 소상공인을 위한 간단한 대응 팁

- 위험성평가표(양식) 작성 및 주기적 업데이트
-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작은 규모라도 대표자가 겸임 가능)
-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무료 컨설팅 활용
- 업종별 표준작업지침서(SOP) 참조
- 지역상주 재난안전보안관 상담 및 교육

4. 소상공인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기본형)

본 문서는 예시일 뿐입니다.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재구성하셔야 합니다.

구분	점검 항목	위험 예시	개선 조치 예시
작업장 환경	☐ 바닥미끄럼 방지 ☐ 조명밝기및환기상태확인	☐ 미끄러짐 ☐ 넘어짐	☐ 미끄럼방지매트설치 ☐ 정기 청소 ☐ 환기팬가동
설비 및 기계	☐ 기계/조리기구안전장치여부 ☐ 정기점검기록유지	☐ 손끼임 ☐ 화상 ☐ 기계사고	☐ 정기점검표작성 ☐ 안전커버설치 ☐ 사용전 교육
화재·전기	☐ 소화기비치 ☐ 전기배선정리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화재 감전 폭발	소화기 점검 배선 정리 차단기 교체
위생 및 건강	보호구(장갑, 마스크 등) 지급 위생복 착용 상태 확인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감염	근로자 보호구 지급 정기 위생 점검
근로자 활동	근로자 안전 교육 실시 여부 작업 절차 준수 여부	근골격계 질환 교통사고(배달)	분기별 안전 교육 무리한 작업 지양
비상 대응	비상구 확보 대피 경로 안내 응급구호 장비 구비 여부	화재 시 대피 지연 응급 조치 실패	비상구 확보 대피 훈련 구급함 비치

Ⅲ. 대응방안

중소자영업을 위한 대응 가이드

1. 대응 방안 (소상공인 맞춤)

1. 화재·폭발 예방

- 전기·가스 월 1회 점검 → 체크리스트 기록
- 소화기·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비상구 적치물 제거

2. 근로자 안전

- 보호구 지급 (장갑, 미끄럼 방지화 등)
-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일지 작성 (서명 포함)
- 야간 근무 시 2인 1조 근무 원칙

3. 시설 안전

- 천장, 간판, 조명 낙하 위험 점검
-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정기검사 합격증 부착
- 환기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중소 자영업 사업자

4. 위생·감염병 관리

- 냉장고 온도 기록지 작성
- 유통기한 점검 및 폐기 처리 기록
- 손 소독제·비누 비치
- 직원 건강검진 기록 보관

5.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망 게시 (소방서·경찰서·병원·점주)
- 연 1회 이상 대피훈련 기록
- 응급구호세트 구비 및 유효기간 관리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방안

1. 기본 원칙 설정

- **대표자(사업주)가 안전보건 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소규모 업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표자가 직접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함.
- **서면화된 안전보건 방침 제정**
→ "우리 업소는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간단한 선언문 작성

2.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 점검표 활용**
 - 화재: 전기배선, 가스시설
 - 위생: 조리도구, 환기시설
 - 안전: 미끄럼, 날카로운 도구, 조명
-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 **체크리스트 기록 보관**
→ 법적 증빙 및 개선 자료 활용

3. 예방 활동 운영

- **안전설비 구비**
 - 소화기, 화재감지기, 비상조명
 - 가스누출 감지기, 누전차단기
- **표지판·안내문 부착**
 - 비상구, 대피경로, 화재시 행동 요령
- **개인보호구 지급**
 - 장갑, 미끄럼방지 신발, 마스크

4. 교육 및 훈련

- **정기안전교육** (분기 1회 이상)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대피훈련
- **신규 근로자 교육**
안전규정, 비상연락망, 기본 응급처치
- **모의훈련**
화재 발생 시 대피, 가스누출 시 환기신고

5. 비상 대응 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게시**
119, 112, 전기가스안전공사, 관할 보건소
- **비상 대피 계획 마련**
비상구 확보 및 피난로 표시
- **응급처치 키트 비치**
심폐소생술(CPR) 안내 카드 포함

6. 기록 및 문서 관리

- **안전점검일지 작성**
전기가스 점검, 소화기 점검
- **사고재해 발생 시 상황일지 기록**
- **교육훈련 이수 기록**
교육 날짜, 참여자, 교육 내용
- **법적 점검 대상일 경우 증빙 자료 보관(3년 이상)**

7. 사후 관리 및 개선

- **사고 발생 원인 분석**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지자체, 소방서,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 소규모 사업장 안전지원 프로그램 참여

IV. 문서화와 증빙

중소자영업을 위한 대응 가이드

중대재해처벌 대응 문서 양식

필수 문서

1. 월간 안전점검표
2. 근로자 안전·위생교육 일지
3. 냉장고 온도 기록지 (식품업소)
4. 비상대피훈련 기록표
5. 사고 발생 보고서 +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
6. 보호구 지급대장

📁 모든 문서는 날짜 · 서명 · 사진 첨부 필수

1. 월간 안전점검표

구분	점검 항목	확인 (✓/✕)	개선 필요사항	점검일자	점검자 서명
화재 안전	소화기·화재감지기·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전기·가스 설비 이상 여부				
시설 안전	비상구·통로 확보 여부				
근로자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위생 관리	냉장고 온도 기록·식자재 유통기한 확인				
비상대응	비상연락망 게시·대피훈련 여부				

2. 근로자 안전·위생교육 일지

교육일자	교육 내용	교육 대상자 (이름/서명)	교육 강사	비고
2025.08.04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	홍길동 / 서명	점주	사진 첨부
2025.08.04	주방 미끄럼 방지 및 칼 사용법	김철수 / 서명	점주	자료 첨부

3. 신규 직원 안전교육 확인서

제목: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확인서

- 근로자 성명: _____
- 입사일: _____
- 교육일자: _____
- 교육 내용:
 - 1) 화재 대피 및 소화기 사용법
 - 2) 보호구 지급 및 착용법
 - 3) 위생관리 준수사항

교육 강사: _____

근로자 서명: _____

4. 냉장고 온도 기록지 (식품 취급 업소용)

날짜	시간	냉장고 (°C)	냉동고 (°C)	점검자 서명	비고
8/1	오전	3°C	-18°C	홍길동	정상
	오후	4°C	-19°C	홍길동	정상
8/2					

5. 비상대응 연락망

구분	연락처	담당자
소방서	119	-
경찰서	112	-
인근 병원	000-0000	○○병원 응급실
점포 책임자	010-XXXX-XXXX	○○점주
상인회 안전 담당	010-YYYY-YYYY	○○안전위원

 반드시 매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6. 비상대피훈련 실시 기록표

훈련일자	참여 인원	훈련 내용	훈련 지도자	비고
2025.06.10	직원 5명	화재 대피 훈련 및 소화기 사용 실습	상인회 안전담당	사진 기록첨부
2025.07.10	직원 4명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재난안전 보안관	사진 기록첨부

7. 사고 발생 보고서 (재발방지 대책 포함)

사고 발생 보고서

- 사고일시: _____
- 사고장소: _____
- 사고유형: (예: 화재, 낙상, 감전 등)
- 피해현황:
 - 사망자: ___명
 - 부상자: ___명
- 즉시 조치사항: _____
- 응급구호 및 신고 여부: _____
- 원인 분석: _____
- 재발방지 대책:
 1. _____
 2. _____
- 점검자 / 대표자 서명: _____

8. 정기 안전회의록 (상인회·관리조합용)

회의일자	회의 안건	참석자 (서명)	주요 합의사항	차기일정
2025.06.15	전기배선 정기점검 계획	10명	8월말까지 전기안전공사 점검 실시	9월10일
2025.07.15				

9. 보호구 지급대장 (제조업·주방 등 위험업종용)

지급일자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지급 대상자 (서명)	비고
2025.07.12	장갑	5켤레	김철수 / 서명	-
2025.07.12	미끄럼 방지화	3켤레	이영희 / 서명	-

10. 월간 안전관리 종합 보고서 (관리주체용)

월간 안전관리 종합 보고서

- 작성일: _____
- 점검자: _____
- 점검 결과 요약
 1. 화재 안전: _____
 2. 근로자 안전: _____
 3. 위생 관리: _____
 4. 시설 안전: _____
- 개선 필요사항: _____
- 조치 완료일: _____
- 대표자 서명: _____

핵심 메시지

중대재해처벌 대응은 문서화가 핵심

안전점검표, 교육일지, 훈련 기록, 사고보고서 4종은 반드시 상시 보관

재난안전지도사는 현장 사진 + 서명 기록 여부를 특히 확인해야 함

V. 실제 사례와 교훈

중소자영업을 위한 대응 가이드

실제 사례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6)

☞ 전기배선 노후, 소방 미작동 → 대규모 피해

뷔페 식중독 집단발생 (사례)

☞ 냉장고 온도 기록 없음 → 수십 명 치료

소규모 제조업 협착 사고

☞ 보호구 미지급 → 대표자 법적 책임

☞ 공통점: 예방조치와 기록 부재

☞ 교훈: 기록과 예방조치가 있으면 처벌 경감 또는 회피 가능

1. 소상공인이 주목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근 현황

- 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
- 최근에는 일부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감독 사각지대 해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음.

1.2 기소 및 판결 동향

- 검찰은 2022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90건을 기소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40건에 이릅니다.
- 법원의 유죄 확정률은 약 89~9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실형은 드물고 대부분 집행유예.
- 대표적인 유죄 유형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 (시행령 제4조3호)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평가·예산 미부여’ (제5호)

1.3 최근 판결 사례 및 특징

2025년 6월, 원청 대표가 **안전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원청 무죄 판결 중 처음으로 의무 이행을 근거로 한 판결.

또한,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에도 여러 무죄 판결이 있으며, 이는 법이 ‘결과 발생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 · 예견 가능성’** 등 사고 구성 요소가 판단 기준임을 재확인한 사례.

반면, 2025년 4월 경북 지역 사건에서는 대표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에 3,000만 원 벌금이 선고.

1.4 감독 및 제도적 변화

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 평가 인정 기준은 **70점→90점**,
- 실행 수준 평가 비중 **50%→60%**,
- **근로자 참여 항목 비중 20%→25%**로 상향되었습니다.

단순 문서 작성이 아닌 실제 **실행과 점검 이력 중심의 평가**로 기준이 전환 중.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도 감독 대상이 되고,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및 이행점검 진행.

1.5 최근 불기소 사례 및 시사점

검찰은 사건마다 회사 구성된 **안전보건 체계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을 검토해 불기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짐.

즉, 기업이 충실히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가 수사·기소 여부에 영향.

1.6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

대응 항목	권장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책임자 배정, 예산 확보 문서화
위험성평가 강화 대응	근로자 참여, 실행 기록 남기기, 사후점검 이력 확보
전문가 자문 및 점검 도입	하이브리드(디지털+법률) 기반 솔루션 도입 추천 (예: SCSC)
교육과 문화 내재화	단기 대응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문화 구축이 핵심

1.7 향후 전망 및 핵심 포인트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중심법**’에서 **예방 중심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로 진화 중
 - 다만 법 조항의 모호성, 지나치게 규제 중심 구조, 전문가 의존성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
 - 최근 일부 법원이 위헌 판단을 제청하거나 원청 무죄 사례가 나오면서 관련 법률의 해석 방향이 주목.
-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 ✓**예방 체계 구축과 점검, 기록 기반의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VI. 핵심 메시지

중소자영업을 위한 대응 가이드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후 처벌이 아니라 **사고 전 예방**이 핵심
- ❖ 소상공인도 중대시민재해와 민·형사 책임의 대상
- ❖ **정기점검 + 교육 + 문서화** = 유일한 방패
- ❖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

부록1: 소상공인 맞춤 체크리스트 요약

구분	필수 점검 항목
화재 안전	소화기·감지기 정상작동, 가스·전기 점검, 비상구 확보
근로자 안전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일지, 야간근무 안전
위생 관리	냉장고 온도 기록, 유통기한 점검, 위생용품 비치
시설 안전	천장·간판 고정, 승강기 검사, 환기시설 확인
비상대응	비상연락망 게시, 대피훈련, 응급구호세트

자주 묻는 질문 Q&A

중소자영업을 위한 대응 가이드

Q1. "우리 가게는 직원이 3명뿐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AI. 답변 :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3명만 근무하는 일반 음식점이나 미용실은 산업재해 측면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재해**, 즉 손님이나 방문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 수와 무관 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님이 매장 내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크게 다친 경우, 만약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가 적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재해 쪽 대응을 꼭 옆두에 두셔야 합니다.

Q3. "안전교육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와서 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소규모 자영업장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부르기 어렵죠.

법에서 요구하는 건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즉,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활동이면 되고,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 가스 누출 대처법
-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
-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들을 본인 또는 책임자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출석부에 서명만 남겨도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교육을 했다는 기록과 내용”입니다.

문서로 남겨두기만 하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4. "사고가 나면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 아닌가요?"

A4.

자,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험은 민사적 손해배상용이지, 형사책임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왔다고 해서 경영자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났는데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었고, 점검표도 없고, 교육도 안했어요. 이러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판단되고, 경영자 또는 대표님이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최소한의 수단이고,

중요한 건 사전에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예요.

Q5."우리 가게는 체험이나 전기기구 같은 것도 없는데 해당 안 되죠?"

A4.

그럴 수도 있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이나 카페도 전기기구, 화학제품, 뜨거운 물, 미끄러운 바 닥 같은 위험요소가 있어요.

게다가 아이, 노약자, 임산부 같은 분들이 이용하다가 다치면 사고가 더 커 질 수 있죠.

즉, 업종의 특성보다는 ‘**위험 요소를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작은 업소일수록 간단한 기록, 주의표시, 교육자료 비치만 잘해도 큰 방패가 됩니다.

결론 :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은 겁주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체크리스트**, **교육 기록**, **위험요소 점검표** 만 잘 챙기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 우리 손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까요.”